아파트 매물 넘치는데…청년들 "내집은 어디에"

세금 부담에 물량 늘어도 천정부지로 솟구친 집값 감당 못해

광주 매물 증가율 1위에도 내집 마련 어려워 허탈·한숨 가득

광주시 북구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 김모씨는 1년 뒤 결혼을 계획하고 신혼집 마련에 나섰다. 손에 쥔 돈은 10년간 직장 다니며 모아둔 1억원. 광주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지인 말을 듣고 '대출을 끼면 웬만한 집은 사겠지'라며 발품을 팔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온·오프라인 부동산중개소마다 지인 말처럼 매물은 넘쳐났지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에 사는 30대 초반 회사원 박모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시골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로 했다.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둔 돈으로 20평대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2억원이 모자라 대출을 알아봤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시기에 덥석 은행 돈으로 집을 샀다간 화근이 될 것 같아서다. 박씨는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해보려 했지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에 한숨만 나온다"며 "광주에 매물은 쌓이고 있다지만 내 집은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광주지역 20~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하나둘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이는 월급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가파르고 기성세대보다 경력이 적어 신용대출도 한계가 있다는 건 20~30 세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작 광주 청년들이 아파하는 부분은 매물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쌓이는데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는 데 있다. 청년들 말대로 광주에는 아파트 매물이 엄청난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게 수치로 드러난다.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물(전·월세 포함)은 지난 3월 6일 7623건(누적)이던 것이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기준, 1만3601건으로 78.4%나 폭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매물이 쌓이는 속도는 광주가 1위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새 정부 보유세 완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달리, 광주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팔자 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들 표현처럼 시장에 매물이 쌓여 넘치고 있지만 20~30 세대들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청년들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매물이 이례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금리 인상과 세금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물건을 상당수 내놨고, 올봄 입주 물량이 2000가구 이상 쏟아지면서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이 기대만큼 떨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규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북구지회장은 "매물이 쌓여가고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지만 당장 가격 조정 징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금리 부담도 있어 자산이 적은 20~30 세대들의 내 집 장만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광주시 문길상 토지관리팀장(주택동향)은 "올 2~4월 매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3월 발표된 지난 2월 한 달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84건에 그친다. 주택시장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갑자기 내려갈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연인이 다른 남자 만난다며 노래홀 방화 시도 50대 검거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자주 만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단골술집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광주동부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노래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택시를 타고 구입한 17ℓ 인화물질(시너) 1통을 들고 노래홀 영업시작을 기다리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이 되자 노래홀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밤 10시께에도 해당 노래홀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실시공 이젠 그만…후분양제 의무화 추진

이형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학동 붕괴 사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후분양 방식은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을 하는 방식이며, 선분양 방식은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분양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분양 방식은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복잡한 도급구조로 부실 가능성이 크고, 분양과 하자보수가 따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는 개정안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다시 일상? 늘어선 줄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방역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6일 오후 광주 동구 구시청의 한 주점 앞에 청년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완도 군의원 양식장 앞에 난 도로 '시끌'

논·밭 거의 없는데 농로 조성…지역사회 "편의 제공했나" 의혹

완도군이 군 예산을 들여 포장한 농로를 두고 인근에 양식장을 운영하는 군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 완도군 군외면에 농로 포장 공사(길이 150m·폭 3m)를 진행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진행된 도로 포장을 두고 인근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A 군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도로 주변에 농로 조성 조건인 논·밭이 거의 없는데다, 도로 포장이 A의원 소유의 양식장 마당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로가 아님에도 농로로 둔갑해 2000만원의 혈세가 편성됐다는 점에서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농로 포장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을 진행한 군외면사무소 관계자는 "해당도로는 농로는 아니지만 인근 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며, 맞은편에 다른 양식장도 있어 A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ejhung@

19명이 1박2일 송별회…기강 해이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 광주·전남 7건 적발 23명 징계

정부가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복무 감찰에서 광주·전남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8행위 53건이 적발됐다.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7건이 적발돼 공무원 2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적발 유형은 선거중립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출장여비 부정 수령,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이었다.

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에 가입해 올해 3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한 것이 적발돼 '훈계'처분받게 됐다. 광주시 공무원 B씨 등 2명은 최근 2년 사이 무려 28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19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 가산징수와 함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순천시 공무원 C씨는 지난해 6~11월 모두 24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24만원을 추가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영광군에선 9개 부서가 군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모 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업법인에서 총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 등을 사들여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목포시 공무원 D씨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16건, 1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됐다. 영암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직원 19명이 해남 펜션으로 1박2일 원정 송별회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 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 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